

2·28의 **햇** **불**

2001 창간호

시론

2·28민주운동과 NGO의 만남

기획특집

제도화된 부패와 제도화된 대응
전박한 사회와 부패한 정치

지역쟁점

부상하는 광역시·도통합 논의
지역경제의 진단과 발전방안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The Daegu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http://www.228.or.kr>

2·28 찬가

달구벌 정기 받아 정의의 꽃 피던날
햇불같이 일어나 민주헌에 불지켰네
타오르는 젊은 함성 독재의 어둠 밀어내니
야! 영원히 빛나리 민주주의거
민주주의거의 그날 2·28 그날 2·28

비슬산 푸른 기상 하늘높이 치솟던날
폭풍같이 일어나 민족혼을 일깨웠네
노도같이 끓는 피 독재의 사슬 끊었나니
야! 영원히 이어가리 민주승리
민주승리의 그날 2·28 그날 2·28



(표지설명)

2·28민주운동기념탑을 배경으로 햇빛 떠오르는 봄빛을 포화시켜 민주·민주운동의 정신과 이상을 평범히 이야기하고자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편시 4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 홍종흠
축시 6	대구광역시시장·공동의장 / 문희갑
8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 이수기
9	대구광역시 교육감 / 김연철
2·28 시론 10	2·28민주운동과 NGO의 만남 / 최용호
기획특집 : 정치·사회부패 생산 12	법률적 접근 / 제도화된 부패와 제도화된 대응 / 문순갑
16	사회학적 접근 / 천박한 사회와 부패한 정치 / 박순대
지역쟁점 20	부상하는 광역시·도통합 논의 / 이종호
24	지역경제의 진단과 발전방안 / 임원용
시민단체소개 26	3·15의거 기념사업회
27	4·19혁명 부상자회
28	4월회
2·28역사자료실 29	석강(石梁)김덕룡 선생과 2·28
2·28소식 31	2·28민주포럼 창립기념 모듬토론
회원광장 33	시 - 봄꽃 / 정태일
34	시 - 지금이라도 시작할 때 / 장영향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연내 35	연혁 / 2001주요사업계획 / 정관
44	2·28 화 보
입회안내 49	입회원서 / 회비입금 계좌번호(대구은행 018-05-002264-2) 예금주 :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의 햇빛 통권 제1호 2001년 봄호 개간

발행인 / 홍종흠 · 편집인 / 박재관 · 발행일 / 2001년 2월 28일 · 편집주간 / 오성근

편집위원 / 정서익 · 발행물 액전호 박명철 · 운송료 배석기 · 취재비 공태일 · 김일수 · 이창규

발행처 /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주소 / 701-013 대구광역시 동구 선암 3동 164-1(대구은행 선암동지점 2층)

TEL : (053)943-0228, 959-2862 · FAX : (053)959-2860

E-mail : 228demo@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228.or.kr>

단체소/공복단체(주)

민주·민족문제에 대한 방향모색과 지역민의 정체성 회복에 앞장서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 홍종흠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역사적 의거 41년만에 사단법인체로 발족, 영속적인 기념활동의 원년을 열면서 기관지로서 "2·28의 햇불"을 창간하는 것은 대구·경북지역 민주·민족운동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2·28 민주운동은 단순히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고 선양하는데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2·28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더 큰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완으로 남아있는 민주화와 통일은 여전히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지상명제이다.

이제 "2·28의 햇불" 창간을 통해 그 같은 민족·민족운동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지역에 잠재된 역량을 더욱 공고하게 결집시켜 사회 각 분야에 2·28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우리의 발언과 참여를 본격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28의 햇불"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지역의 각계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토론하고 뜻을 모으는 광장의 역할을 자임하려 한다.

2·28 이후 이승만 독재와 30년간의 권위정부가 물러가면서 이 땅에 민주개혁의 바람이 일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성과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부패가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토착비리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현상들은 어렵게 일구어놓은 민주화의 터전을 자칫 황폐화시킬지도 모를 것 같은 우려를 갖게 한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민족문제의 해

민족·민족운동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지역에 잠재된 역량을 더욱 공고하게 결집시켜 사회 각 분야에 2·28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우리의 발언과 참여를 본격화하고자 한다.

경도 국론분열과 정파적 이기주의 때문에 전도가 불투명한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이러한 모든 과제들을 모두 쏟아놓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또한 2·28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 마침내 민주혁명의 한 단계를 성취했듯이 “2·28의 햇불”은 지역과 계층적 구분을 뛰어넘어 순수한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서로 대화하고 연대하여 힘을 모으는 어우름의 한 마당을 만들려는 것이다.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를 통해 2·28대구민주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물론 전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어깨동무해서 가려고 한다.

이러한 민주·민족문제에 대한 방향모색과 함께 대구·경북지역의 정체성회복에도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2·28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을 드러내는 일과 2·2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 및 평가의 보완은 “2·28의 햇불”이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엄숙한 사명이다. 대구·경북은 일제하에선 국채보상운동의 첫 봉화를 올려 지역민의 남다른 독립정신을 고취시켰고, 건국 이후에는 2·28민주운동으로 민주화의 첫 햇불을 들어 민주정신의 불씨를 지켰다. 이것이 지역민의 정신적 양대 지주임을 “2·28의 햇불” 창간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지역민의 정체성회복에 나서려한다.

2001. 2. .

21세기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햇불이 되기를



대구광역시장
공동위원장 문 회 갑

새천년 새희망 새기대 속에서 삼라만상이 움트기 시작하는 이 때 우리 고장을 필두로 분연히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의 산 역사를 새로이 조명할 “2·28의 햇불”지가 온 시민의 성원 속에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암울했던 역사의 현장을 누누이 넘나들며 2·28 민주운동의 자료수집과 정리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편집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2·28민주운동은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항거하여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순수학생운동으로 민주국가 실현의 모태가 된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그간 3·15나 4·19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에 대해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28민주운동사편찬과 국제학술회 개최 그리고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2·28공원조성을 준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의 2대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범시민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나라사랑의 국채보상정신과 2·28민주정신을 구현하여 세계속에 우뚝솟는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구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하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그리고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자연친화적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정부가

시행한 물관리 정책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로부터는 세계 12개 환경도시(Solar City)중 하나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살기 좋은 환경·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모두가 합심·노력하여 이룩해 낸 값진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대구는 이러한 시민적 저력과 도시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금년 5월 JCI아태 지역대회와 대륙간접 국제축구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60억인구의 꿈의 제전인 월드컵대회와 국제섬유박람회가 있고, 2003년에는 젊은 지성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회원 여러분의 주도적인 역할과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썬로 "2·28햇불"지가 1960년 2월 28일 부정과 불의에 맞섰던 정의와 민주합성을 오늘에 계승하여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햇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간지의 창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박재건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편집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2. .

자유와 민주화의 횃불을 더 한층 밝혀 고귀한 정신을 후손에 전수하는 밑거름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 수 가

2·28 민주운동 41주년을 맞이하여 대구 청년학도들의 숭고하고 순수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2·28의 횃불」이 창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50만 시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2·28 민주역거는 지역의 학생들이 당시 독재정권의 불의에 대해 맨주먹으로 당당히 맞선 쾌거로써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학생운동이 4·19혁명에 묻혀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2·28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되고, 「2·28민주운동사」가 발간된 데 이어 마침내 「2·28의 횃불」이란 계간지를 창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그동안 반목과 대립관계에 있던 남북한이 지난해 정상회담에 이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자유, 민주,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가꾸어 온 자유와 민주화의 횃불을 더 한층 밝히나기야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 학생운동사의 금자탑인 2·28 민주역거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길이 후손에 전수해야함은 물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2. .

2·28민주의거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시민정신의 전형을 창조해 나가야



대구광역시교육감
김 연 철

2·28 민주의거가 일어난 지도 어언 40년, 돌아보건대 지난 40년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한 시기였으며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 또한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28 민주의거와 같이 독재와 불의에 맞서 분연히 항거하는 시민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새 천년으로 접어 든 우리사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패와 비능률로 인한 낮은 국가경쟁력, 날로 심화되는 지역간, 계층간 격차 등이 선진사회로 진입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서 선진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28 정신은 오늘 이 순간에도 매우 소중하며,

이를 되살려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나 우리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와 지역 패권주의가 이 지역의 정서인 양 인식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통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8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2.28 민주운동을 발간하고 옛 중앙초등학교 터에 2.28 민주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이 고장에서 마저 잊혀져 가던 2.28을 되살려 왔습니다. 나아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2.28 정신을 교과서에 삽입하여 후학들에게 전승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2.28 정신의 역사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제는 이를 애향운동에 접목하여 지역감정 극복운동으로 승화하려는 노력을 펼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이 다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구·경북지역의 시민정신의 뿌리로서 국제보상운동과 2.28 민주의거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지역사회의 경제적 낙후성과 정치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민정신의 전형을 창조하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점차 세계화의 요람으로 우리 역사 속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2.28 창간호가 발간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나아가 우리의 소명을 완수케 하는 가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 가족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창간호라는 옥동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으로 노력하신 편찬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 2. .

2·28민주운동과 NGO의 만남

최 용 호 경북대 교수

2.28민주운동이 시작된지 어느새 41년.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운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그 이념은 여러 가지 양태로 표출되고 있다.

4월혁명의 직접 도화선이 되어 196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암울한 권위주의 정치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반독재 투쟁과 각종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2.28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탈바꿈하면서 「2.28민주포럼」을 창립하고, 「2.28의 햇불」이란 회지를 창간하게 된 것은 이 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특히 민주포럼의 창립기념 모듬토론(civil conference)에서 2.28민주정신의 현재적 실현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대표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라 생각된다.

이는 2.28민주운동의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물론, 지역의 NGO(비정부기구)들이 시민운동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조명하고 2.28민주정신의 구현을 위한 공감대를 굳건히 다질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20세기에는 학생운동이 한국사회를 움직인 큰 중심축의 하나였다면, 21세기에는 NGO가 정부, 기업, 언론과 함께 현대사회를 끌고 갈 큰 수레로 역할 할 것이 틀림없다. 과거에는 학생운동이 사회개혁운동의 선봉이었다면, 앞으로는 각 분야의 시민운동이 사회개혁운동의 기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NGO 활동도 세기를 바꾸면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NGO들이 반독재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왔기에 서구의 NGO들과는 달리 대단히 투쟁적이고 정치성이 강했었다. 그것은 출발의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서구의 NGO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비대해진 정부와 강력한 이익집단에 맞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NGO들은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개선시정하고, 권위주의 정치질서에 실질적으로 대항하는 성격을 띄면서 출범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떻든 우리의 NGO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초기적 단계를 넘어서서, 민주사회

시민들의 참다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준법성과 고도의 전문성,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 재정적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부문화의 정착 없이는 시민운동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모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의 권리신장과 민주사회의 건설에 우리모두 발벗고 나서야 하겠다.

의 발전 속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 합법성이 없고서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거창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 가려운 곳을 찾아내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노력이 보다 더 소중하다. 시민들을 끌어 앉지 않고서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정치 투쟁보다는 법제화와 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소박한 권익을 보호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

미국의 「정부책임강화사업」의 「루이스 클락」사무총장은 NGO가 시민의 지지를 얻는 비결로 법을 지킬 것, 스캔들이 없을 것, 본분에 충실할 것, 무엇보다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참다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준법성과 고도의 전문성,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 재정적 투명성, 정치적 중립

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 받고 신뢰받는 NGO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NGO지도자들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서구의 시민운동이 꽃피는 바탕에는 두터운 시민참여층과 튼튼한 기부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환경운동단체에는 조건 없이 운동자금을 제공하는 재단만도 1만여 개를 넘고있다. 정말로 부러운 일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부문화의 정착 없이는 시민운동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모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의 권리신장과 민주사회의 건설에 우리모두 발벗고 나서야 하겠다.

2.28민주운동과 NGO의 만남을 축하하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하는 바이다.

제도화된 부패와 제도화된 대응

윤 순 갑 경북대 교수

드디어 우리사회가 1백만 실업자 시대에 접어들었다. 97년 실업자가 56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세라고 할 수 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IMF사태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다시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가인상과 미국경제의 침체 등 국제경제의 어려움,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미비, 주식시장의 침체 등을 우리 경제의 주요 위기요인으로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사회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사실 97년 말 IMF사태가 발생하자 많은 학자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등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부패고리가 위기의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부정부패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당당하게 '예(Yes)'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99년에 「국제투명성기구」(IT)가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뇌물공여지수(BPI)가 수출주도 19개국 중에서 중국을 제의

하면 최하위라는 보고나, 2000년 6월 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현정부 들어서도 공직부패가 여전하다”라고 응답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부패가 그리 단순하지 않은 '제도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화된 부패는 개인적인 자성(自省)이나 자정(自靜)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사회 전체에 불신의 그림자를 짓게 드리워서 중국에 가서는 그 사회를 전반적인 부실과 위기로 몰고 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부패가 제도화된 사회에서는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과 관행으로 행세하고, 효율성과 형평성 등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기준이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구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불필요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지불하게 한다. 문제는 이것에서 생긴 보잘 것 없는 수익은 부패를 주도한 일부 구성원의 것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실로 엄청난 부담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

하는 문제는 정권교체기나 단골 메뉴로 선택되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그런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처럼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걸고 다루어야 할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 우리 자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감사원 자문기구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공직자 윤리법, 형법상의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편화·구조화 되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존의 제도적 접근은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각종 사회단체와 정치권의 통합적인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특히 정치권의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너무나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96년 12월 3일과 5일 당시 야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부패방지법안」과 「부패방지기본법안」은 발의된 의원들의 손에 의해 각각 98, 99년에 철회되었고, 같은 해에 제안되었던 여·야의 법안은 제대로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15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처분되었다. 또 16대 국회 출범과 더불어 통합적인 부패방지법 제

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야가 각각 종전의 입장과 바뀐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37년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성역 없는 수사과 철저한 집행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통제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도 1948년 「뇌물방지법」(The Prevention of Bribering Act)을 제정하여 담당 인력이 무려 1,300명이나 되는 '廉政公署'(ICAC)의 장기적인 부패척결 활동과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성공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부패방지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부패방지기구는 업무의 성격상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새로이 설치될 부패방지기구는 '법률상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헌법상 국가기관'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기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신설되는 부패방지기구가 입법과 행정, 사법의 헌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부패방지기구는 감사원의 경우처럼 그 소속을 대통령 하에 두되 직무상의 독립

적인 지위는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구성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기능 이외에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특별검사 임명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 역사가 역론법(Lord Acton)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고위 공직자일수록 부정의 유혹은 강한 법이다. 부정부패의 추방은 '뿔물 맑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 나라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조직원리로 하고 '기소독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대로 '법부부 例規'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결정을 통제받고 있다. 99년의 '웃 로비 의혹사건'과 최근의 '한빛은행 대출의혹사건'·'동방금고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고, 국가공권력으로서의 검찰권이 공익을 수호하기보다 정치권력에 예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이 여·야의 입장 차에 따라

특별검사제도 수용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부패권력 봉제를 위한 특별검사제도의 유용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은밀한 유착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통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호주·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내부고발을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회공동의 목표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충돌을 이유로 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인 대만이나 홍콩 등에서 무리 없이 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의 설득력은 미약하다. 오히려 이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에는 고발자에 대한 불처벌을 넘어서 이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대형 부정부패 스캔들이 불거질 때마다 '떡값 논쟁'이 불거져 나오곤 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액수를 '떡값'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뇌물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불명확성이 뇌물 제공자를 관대하

게 처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냉소적인 인식과 공직자를 경원시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뇌물 권하는 잘못된 사회풍토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패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선조 한국사회가 고위층의 부정을 감시·탄핵하던 대간(臺諫)의 언론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세도정치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방국의 길을 걷

고 말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물론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일조일석에 척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제도적 접근의 한계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공직자들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적 양심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제도적 의지에 공감하여 생활 속에 실천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한 신사가 정원사에게 어떤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
 “주인님, 이 나무는 자라는데 몇 백년은 걸리겠는데요,
 정원사의 심드렁한 대꾸에 신사는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더더욱 당장 심어야겠네.”

천박한 사회와 부패한 정치

백 승 대 명남대 교수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안기부 예산 유용 의혹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때마침 필리핀에서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국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와히드 대통령이 정치비리 추문으로 탄핵 직전에 몰리는 사건이 일어나, 아시아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스캔들이 다시 한번 부패한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전대통령은 1996년에 치러진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 중 약 1200억원의 자금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법원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검찰의 발표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한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부패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선진국이라 부르는 독일에서 통일 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콜 전수상이 정치비리로서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나,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명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우리 나라나 아시아권 국가에 한정된 현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회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보

편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죄의식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되는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정치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그 주장을 수긍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곰곰히 따져보면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정치인들을 한결같이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인들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으며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부패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로 오염되지 않은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정치인들은 권력자에게 밉보여서 잘못 걸려든 것이지, 정치권은 깨끗한데 그가 특별히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짐작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정치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고 관행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상화되고 관행화되어 있다는 말은 일상적인 생활사처럼 아무런 죄의식없이 정치부패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늘상 반복되고 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부패행위나 비리 행위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에게서 부패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것

이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부패 행위에 대한 정치인들의 무던 도덕적 감각은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부패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재기하고자 하고 잘도 재기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정말 불사조와 같은 존재들이다. 부정부패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정치인이라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사면복권이라는 절차를 밟아 너무나 손쉽게 소생한다. 죄의식이 분명한 정치인이라면 아예 다시 부활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관행적인 행위를 두고 왜 나만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어 처벌하는가 하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뽀뽀스럽게도 다시 국민 앞에 재기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왜 한국사회에는 이처럼 정치부패가 일상화, 관행화, 보편화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정치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서, 굴곡진 한국 정치사에서, 그리고 일천한 민주주의의 역사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회의 천박성 또한 정치부패의 일상화를 낳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한국 정치의 저질성, 그리고 한국 사회의 천박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뒤얽혀 있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는 외형적으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며,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부패가 근절되지는커녕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민주화된다고 해서 정치부패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확

인하게 된다.

사회 전체가 온통 천박한 행태로 물들어 있다면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정치 역시 천박한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다. 사회는 천박하더라도 정치는 깨끗하고 선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생각일 따름이다. 한국 정치의 천박성은 전직 대통령들이 보여주는 행보에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많은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는 커녕, 범죄자나 돈키호테로 국민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한 사회에 목표를 부여하고 그 사회의 질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안녕과 복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정치활동은 사회의 가장 앞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활동이다. 동양 사상에서 치자의 도리가 강조되고 덕치가 중시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정치가는 그 사회를 끌어가는 리더로서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치가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시정 잡벽의 행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지위상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이나 지위에 걸맞는 품격이나 품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공공성을 띠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들에게 주어진 정치권력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자원이다. 사적인 자원이 아님은 분명하다. 적어도 인민주권설을 수용한다면 권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가의 지위는 공공적인 지위이며, 그 지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

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공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쟁기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이런 표현이야말로 천박한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정치인을 거의 신뢰하지 않으며 고등 사기꾼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정치인들이 거짓말쟁이, 무뢰배, 사기꾼처럼 인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질 정치를 가져온 한국 사회의 천박성은 무엇때문일까? 유교적 예의전범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처럼 알려진 한국사회가 어째서 이렇게 천박할까?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성장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돌진적 근대화(rush modernization)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불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을 도외시하는 악습이 고착된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이 함께하는 사회가 아니라 양자가 괴리되어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때문에 머튼(R. K. Merton)식으로 말한다면, 아노미(anomie)와 일탈현상이 일상화된 사회가 된 것이다. 일제 식민지의 어두운 과거와 이승만 정권 이래 되풀이되어 온 정치 파행, 그리고 권위주의정권의 돌격대식(혹은 불도저식) 경제개발은 이 나라에 품격과 품위의 중요성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오직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출세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전국민이 너나 할 것없이, 그리고 지도층과 사회의 저변층 할 것 없이, 오직 돌격 앞으로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이다. 인문적 교양과 품위의 중요성은

부정되고 오직 천박한 실용주의 노선만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은(특히 선출직 인사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품격과 품위를 무시한 채 돌격대 정신으로 출세를 지향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돌격대 정신에 가장 충실한 사람, 수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 품격과 인문적 교양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자기성찰성이 가장 없는 사람이 이 나라의 정치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돌격대 정신으로 충만한 사회, 품위와 인문적 교양의 가치가 부정되는 사회에서는 근대성의 특징이라고 지적되는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설혹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지는 못한다. 인문적 교양이란 바로 인간 자신과 인간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착하는 지식이 아니던가. 인문적 교양없이 자기성찰성을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쉽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가 있어야 자기 정화도 가능하고 정직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성찰없이 어떻게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으며,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어떻게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채거리문화 역시 자기성찰성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품위와 인문적 교양의 토대 위에서 자기성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좁은 우물에 갇혀 눈이 멀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성찰성이야말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능하게 한다.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겠으

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겠는가.

사실 부패정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인문적 교양과 품위로 충만되어야 한다. 정치부패 그것은 우리 사회의 만성 질환이지 급성 질환이 아니다. 급성 질환은 수술 요법으로 간단하게 치유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성 질환은 수술 요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만성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동양 의학에서 제시하는 방법처럼 몸을 보양하여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으로서 정치부패를 막기 위해서 제도개혁이 선결과제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도개혁만으로는 결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본 바이다. 한시적인 제도개혁이 아니라 부패방지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품격과 인문적 교양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품격과 인문적 교양 없이는 정치개혁이 상시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일회성 개혁만으로는 정치부패가 제거될 수 없다.

정치개혁의 분위기가 일상화되어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박한 사회를 품격과 인문적 교양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어가야 한다. 그것이 야말로 정치부패라는 만성 질환을 고치기 위한 사회제 질개선 노력이다. 사회 성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품위와 교양의 토대 위에서 자기성찰성을 높여나간다면 사회의 자기정화능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패정치인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품위와 교양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정치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가 단순히 명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과 복리를 추구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예술이 될 것이다.

교양과 품격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 이를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사회이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도구적 교육과 수단적 교육으로 가득차 있다. 아직도 교육은 명목적인 출세를 위한 들쭉대정신을 주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역대 정권이 쉽없이 교육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딜레마이다. 오히려 실용교육을 지향하는 도구 교육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안 교육 움직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겠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보면 한줄기 희망이 보인다. 일찍이 2.28학생운동,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민주화운동은 시민운동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일방적으로 천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커다란 역사적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자기정화의 기회를 단속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희망이다. 그런 점에서 천박한 사회를 청산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는 셈이다.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천박성을 극복하고 부패한 정치를 깨끗한 정치로 바꿀 수 있는 든든한 지주가 될 것이다.

부상하는 광역시·도 통합논의

하 중 호 대구광역시의원

1. 통합론의 제기

지방행정체계와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을 손질하려는 행자부의 개편내용이 알려지면서 광역시와 이를 둘러싼 도의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주로 지역출신 정치인에 의해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거나 이해당사자에 의해 단편적으로 주장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소박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정부차원의 의지가 실린 문제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응도 예전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시·도 통합론이 제기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거의 무반응이거나 사적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통합논의는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시민단체와 종교계, 지역원로들이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해 있으며, 대전시 역내에 도청을 두고 있는 충남도는 도청 이전에 필요한 용역발주를 늦추는 등 도청 이전 작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또 해당 시·도지사나 지방의회에서도 공식, 비공식 형태로

찬반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통합론의 제기가 정부로부터 비롯된 만큼, 그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이해집단의 의사표명도 적극적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타 시·도에 비해 대구·경북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럽다. 공식, 비공식 표현을 종합해 보면, 문화값 시장이나 이의근 지사도 내심으로는 찬반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는 있는 듯 보이나 공식적으로는 '지켜본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의 정서적 유대와 협력관계를 상하지 않겠다는 시장과 지사의 정치적 처신 외에도 대구·경북과 타 시·도의 경우가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경우는 인구, 재정력 등에 있어서 자생력 있고, 경제활동이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각각 독립된 완결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된지도 20년이 지나 1986년과 1989년에 각각 분리된 광주, 대전과는 정서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통합론과 불가론의 근거들

통합론의 논리적 근거는 주로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도립예술단, 지방공사와 같이 기능이 유사한 각종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산업입지, 개발계획 등에 대해 광역행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또한 도 농간 기능 분담을 통해 동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촉진된다는 것이 통합론의 핵심이다. 더구나 구조조정이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시·도 통합은 행정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일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에 따른 엄청난 비용의 절감과 도청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위천공단과 같은 산업입지나 쓰레기매립장 문제처럼 광역시 역내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시·도 통합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통합 불가론의 입장에서 통합주장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론 자체가 현실성이 없으며, 도청 이전 문제를 희석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통합론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보내고 있다. 도의 행정은 주로 농촌형인 반면, 광역시는 대도시형 행정으로 행정수행방법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의 자치체도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대등한 법인격이면서도 행정적으로는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도가 통합될 경우 시가 도에 종속되어 자치의 본질이 훼손되며, 일본의 지정시처럼 대도시의 기능과 권한을 유지시킨 채 통합하게 되면 형식적인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는 한발 더 나아가 시·도 통합문제를 넘어 전국을 20개 자치권역으로 나누어 1지역 1자치단체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오히려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만 가져올 뿐 별다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현성도 없고 통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통합 논의 자체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새로운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3. 각 시·도의 입장과 반응

통합논의에 대한 입장과 반응이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대개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그 반응을 나타낸다. 특히 시장이나 지사의 경우는 협력관계와 주인의 유대감을 고려해서인지 가능하면 언급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 광역시의 경우는 통합을 가운, 도의 경우는 통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논의에 대한 각 시·도의 태도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

1) 대구·경북

전술한대로 통합논의가 매우 조심스럽다. 시장이나 지사 모두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의회나 지역사회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는 시·도가 분리된지 20년이 지났고 제각기 완결구조를 어느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합론이 가끔 제기되어 왔으나 그다지 반응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2) 광주·전남

통합문제가 이미 이 지역에서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 문제가 확정되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어서 도청 이전 반대와 통합논의가 맞물려 있다. 지난 연말부터 지역원로, 종교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도청이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기류는 예사롭지 않다. 특히 광주시민을 중심으로 통합운동이 활발한 것은 도청 이전으로 인한 광주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며, 통합추진위원회 측은 남세거부운동, 낙선운동 경고 등으로 통합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3) 대전·충남

충남도는 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지역도 도청 이전과 통합논의가 맞물려 있다. 충남도는 시·도 통합론이 제기된 후 도청이전 관련 용역발주를 미뤄놓고 있다. 당초 올 예산에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에 3-4곳의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대전과 통합하는 것이 도청이전보다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에서 도청이전 작업을 장정 중단한 상태다.

4. 통합논의의 문제점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통합논의는 과거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논쟁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논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통합론 제기에 따른 반응이 조금 더 직접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 시너지효과와 같은 슬로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목표들은 시·도 통합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시·도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시·도 통합은 어차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누가 통합론을 제기하든 그 최종결정은 주인이 해야 하는 만큼 주인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논의가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이나 기득권의 유지, 일목적 애항심에서 출발한 천박한 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두고 현행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검토한 후 가능한 대안중의 하나로써 통합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옳다.

시·도 통합이 아닌 자치체도의 개선이나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의는 비단 대구·경북만의 논의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이 문제는 6개 광역시·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광주 전남은 통합하고 대구·경북은 현행대로 하는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당연한 일이지만 통합논의의 영역을 전 국가적 범위로 확대해 사고해야 한다.

또한 통합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해당지역의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가 그것이다.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관료사회의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통합논의 자체가 정치권이나 관료집단에 의해 독점되게 될 때, 이러한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논의는 지역주민과 관련 학계 등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진단과 발전방안

임 원 용 산학경명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I. 지역경제의 현황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거시지표는 아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성장을 둔화, 주가하락, 금융불안 지속, 구조조정 지연, 물가상승, 고유가 지속,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해 다시금 경제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지역경제는 산업생산지수 하락, 어음부도의 증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 실업자 증가, 자금사정의 악화, 지역주종산업인 섬유산업의 침체 등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때 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지역의 섬유산업은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비중은 약 45%, 수출비중은 약 70%로 지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경기침체로 (주)강울, 강울방직, (주)대하합성, 금강화성 등 지역의 중견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면서 지역 섬유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도 IMF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난 악화, 건설 수주물량 급감 등으로 인해 (주)청구, (주)보성, (주)우방 등 전국수준의 지역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그 여파로 지역경제는 극한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상용차 퇴출, 대우자동차 부도 등으로 인해 지역의 자동차부품관련 산업은 연쇄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이 컸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의 몇 가지 과제들을 살펴보고, 발전전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지역경제의 과제

우선 지역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지방정부의 정책실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성이라는 재벌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정책담당자의 기본적인 경제논리(economic mechanism)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고 싶다. 기업의 경제논리는 언제나 '이윤극대화'라는 사실이다.

설사 지방정부가 대기업의 유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2년 이후부터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체 생산력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섬유, 기계·금속, 건설 등 지역의 전통적 주종산업이 침체하고, 전자, 정보, 통신 등의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또한 재정, 행정, 금융, 산업, 정보기술, 물류,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소위 중추관리기능이 취약한 것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내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구시민의 전근대적 보수성에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문인정권이후 현재까지 지역에 평배한 냉소감 등과 소위 '내가 최고'라는 지역정서, 그리고 지역특유의 보수성·폐쇄성 등으로 인해 지역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두번째로 지역 리더십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대구의 장기적 비전부재, 경북은 물론 부산 등 주변지역과의 새로운 지역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제계 등 지역 경제주체간의 갈등 심화 등은 시민의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여 지역민의 힘을 지역의 발전에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힘을 새롭게 성장의 힘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민정신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의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II. 지역경제의 전망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7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대구 중심산업인 섬유산업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의 성과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며, 대구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어

는 지역보다 첨단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IT, BT 등의 첨단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기회요인과 발전잠재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강한 지방정부, 세계로 열린 시민사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주체간의 협력강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국제행사 - 전시컨벤션센터 개관기념 행사(4월)로 열리는 중소기업수출대전, JCI아태대회(5월)와 대륙간 컴축구대회(6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를 통해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대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롯데가 대구의 산업·문화적 인프라 구축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벌써 '과대표장'이니 대구시민의 '짝사랑 연가'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발표처럼 롯데가 특급호텔 건립과 대구대공원 조성, 골프장 및 구 50사단내 사유지 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지역으로선 묵은 채증을 한꺼번에 털어 버려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지역민에게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삼성상용차의 경형을 토대로 다시 투자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의 묘미를 살려야 할 것이며, 투자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15의거 기념사업회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강주성

우리 현대사를 보면 어느 날, 어느 날이든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3월 15일은 권력자들에게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날이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일깨우고 권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주체성 확인의 날이다.

3·15의거 당시에는 경제가 위기를 치달았고, 민심도 정권으로부터 이반되고 있었다. 자유당정권은 사회에 만연한 위기를 선거부정으로 다스리려 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4할 사전 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유권자 조작, 기권강요, 기권자 대리투표, 득표수 조작, 그리고 자유당 완장을 착용한 자를 곳곳에 배치하여 분위기 장악하기 등이었다. 선거결과는 이승만과 이기붕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애국적인 외침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은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자유당정권은 격화되는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색마수의 배후 조종설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대응을 정당화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민주의 거대한 물결은 막혔다 터진 돌고처럼 역사의 소용돌이를 돌고 도도히 흘러갔다.

『3·15의거 기념사업회』는 그날의 희생영령을 추모하고 그들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고자 출범한 순수 시민단체이다. 1993년 창립한 『3·15의거 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민족·민중항쟁

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3·15의거의 재조명과 위상정립은 오랜 숙원사업이다. 3·15의거 관련시설을 성역화하고, 당시의 정신을 선양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노력 역시 한시도 중단된 적이 없다. 또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3·15의거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부상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다. 이 모두가 부정부패한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시민학생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전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15의거탑의 새단장에 이어,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1,200평 규모의 묘역을 43,000여 평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년에는 1962년 건립하여 낡고 사용이 불편한 『3·15기념회관』을 재건립하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15의거 관련 편찬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져서 기념사진집과 자료집, 사료집 등이 발간되었거나 발간을 앞두고 있다.

『3·15의거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문화행사는 더욱 풍성하다. 35년전 어려운 정치·사회적 여건 하에서 시작되었던 3·15의거기념웅변대회는 여전히 중단이 없고, 전국백일장, 단축마라톤대회, 문학의 밤, 사진전 역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제 『3·15의거 기념사업회』는 외관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뜨거웠던 정신과 기개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데 모든 정성을 쏟으려 한다. 2·28이나 4·19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뜻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 참여하려 한다

4·19혁명 부상자회

해방 후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1957년부터 원조가 줄어들고 세계경제에 불황이 닥치자 한국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아울러 장기집권과 부패·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져갔다. 여기에다 자유당정권은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시민의 규탄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학생과 시민들의 켈기가 격렬해지자, 경찰은 무차별 발포하며 강경진압에 나섰다. 드디어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되었던 김주열군의 시신이 눈에 최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정치장래의 습격을 받아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독재타도 시위로 바뀌게 되었다.

마침내 4월 19일!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 중 일부는 대통령이 머물던 경무대로 향했다. 이에 당황한 자유당과 이승만정권은 서울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운군중에 대한 무력진압을 시도했다. 결국 이날 하루 전국에서 186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 이승만은 임기응변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국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법인 4.19혁명부상자회는 바로 1960년 4·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들을 회원으로 하는 혁명단체이며,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을 영구히 계승·선양할 목적으로 1963년 8월 7일 설립되었다. 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부상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설립취지를 살리고자 4·19혁명독립법을 제정하고, 4·19혁명기념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시민의 질서의식을 확산시키고 민주이념을 널리 전파하는 계몽활동의 하나로 각종 세미나와 학술회, 영상홍보 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4·19혁명부상자회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외형적인 발전도 이루었다. 우선 1998년 10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6번지에 대지 58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4·19혁명회관을 준공하였고, 2000년 8월에는 2만 5천 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반듯한 민주주의의 요람을 마련하였다.

작년 4·19혁명 40주년을 맞아서는 4·19혁명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혁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그 현장감과 숭고한 뜻을 전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4·19혁명 화보집과 CD-ROM을 제작, 4·19도서관에 비치해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혁명의 주요자료들을 영구히 보존토록 하는 계획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사단법인 4·19혁명부상자회는 박종구 회장과 송호·김명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3개 사업부서, 4개 지부, 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로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내던졌던 그 정신을 내일에 이어주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움말 : 박원범 4·19혁명부상자회 대구·경북연합지부 지부장>

4 월 회

1960년 4월 19일은 우리 민주정치사에 영
원히 기록될 성스러운 날이다. 역
사란 바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
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유가 그것을 진실로
바라고 얻으려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선
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개
인이나 집단은 연속된 생활을 감수해야 하고,
한 국가의 국민은 악의에 찬 권력에게 모든 것
을 박탈당해야 한다. 그들은 자유의 행진에서
낙오될 뿐 세계사의 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4·19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자유, 국민의 자
유, 인간의 자유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방관하
지 않았다. 그들은 용감했다. 그들의 지성은 불
의에 항거했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대중의 권리
를 되찾아주었다. 어느 시대나 사회할 것 없이
젊음이 걸어가는 길은 험하고 쓰라리지만, 4·
19의 그들은 비판의식과 행동의식의 일치를 보
여주었다. 4월회는 바로 그때 그 젊은이들과 후
세대가 함께 하는 모임이다.

4월회에는 구질서와 정치부패에 저항했던 학
생들의 순수하고 고귀한 정신이 살아 있다. 역
사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던 주체들의 모임답게
여전히 보다 나은 사회건설과 창조적 봉사를 향
한 의지가 강하다. 회원 개개인이 민주·민족·
동일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숙명을
느끼고 있으며, 그 길을 앞장서 개척해야 할 의
무를 통감하고 있는 것이다.

4·19학생혁명운동 정신을 계승한 4월회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1990년 4월 11일

학생혁명 주체 모임인 무명회에서 혁명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4
월 9일 무명회를 해체하는 대신 사단법인 4월
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4월회의 창립목적은 각자의 입장과 처지 그
리고 살아온 경력이 다르고, 소속집단이나 정
당, 생활환경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혁명 이념의 용광로 속에 다양한 의견들을 용해
시킴으로써 그때의 열을 계승·발전시키려 노력
하는 것이다. 처음 창립회원 172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이제 400명이 함께 할 정도로 성장했으
며, 후배들을 영입하여 4월혁명의 정신을 후대
에 전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월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내용도
다양하다. 우선 매월 외부인사 초청 조찬회와
회원 등산모임을 마련하고 있다. 분기별로 열리
는 세미나 역시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벤트는 모두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시대
흐름을 알리고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처음에는 현역 국회의위원만 30여명에
다 전·현직 장관과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모이
다보니 서로를 잘 몰라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
지만, 자주 만나 어울리고 토론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특히 매월 토요
일 청계산 등산은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기르는 격의 없는 자리였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 4월회는 단단하게 화합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도움말 : 이 수 광 사단법인 4월회 감사〉

석강(石剛) 김덕룡 선생과 2·28

증언 하 향 숙

거의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2·28민주운동의 과정에도 숨은 조력자와 후원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덕룡 선생은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깨끗한 양심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돕고자 애썼으며, 스스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덕룡 선생은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독실한 교인이었다. 친절, 정직, 근면을 최우명으로 삼았던 그는 매우 온후한 성품에 겸손하고 소박한 인간미를 풍겼다. 그러나 사업에 쏟은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해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손수 기쁨을 몸에 묻히며 잠성을 다했다. 김덕룡 선생은 1938년 동양운업상회(東洋輪業商會)를 자영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후에는 대구도기공업사(大邱陶器工業社), 금강양말공업사, 삼덕섬유공업주식회사, 한일기업주식회사를 경영했고, 당시로서는 규모와 시설면에서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었던 한일관광호텔을 대구 중심가에 건립하여 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그가 2·28과 인연을 맺은 것은 신문사를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천주교에서 경영하던 대구매일신문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교회측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주식을 매입해서 사장이 되었다. 신문사를 맡은 후에는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한편, 당시 자유당정권의 비정을 폭로하고 바로잡는데 앞장서고자 하였다. 4·19혁명의 전원이 되었던 2·28민주운동을 맞아서도 김덕룡 선생과 대구매일신문사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예리한 필봉으로 권력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대구매일신문사가 부통령선거 유세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학생들의 저항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나타내자, 자유당정권은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먼저 도청 측이 행동에 나섰다. 김덕룡 선생이 자유당정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장이 어렵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이 가해졌다. 선생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후일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해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묵묵히 협력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계산동 약전골목 근처에 있던 김덕룡 선생의 자택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집안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선생은 엄청난 위협 앞에 굴복하고 재산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잃더라도 깨끗이 뜻을 지킬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했다. 이때 갈등을 해결해 준 조언자는 선생의 모친이었다. 연로한 모친은 “너의 의지대로 해라.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갈 길을 알려주었다. 확실하게 결심이 선 선생은 주저 없이 대구매일신문사의 자유당정권에 대한 비판노선을 견지했고, 2·28민주운동 과정에서도 강력하게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언론계의 지지를 선도했다.

그후 김덕룡 선생은 대륜중·고등학교를 인수하여 학생사랑을 이어갔다. 특히 그 시절 학교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오가며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여러모로 도와 준 일화는 지금껏 아름다운 얘기로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선생은 자유당정권 때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기록 : 오 창 균 편집주간〉

◆ 2·28관련 저술목록

- 결의문, 『강역』7호(1960)
 김윤식,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대구일보』, 1960. 3. 1
 유치환, 2·28 기념비문, 2·28 기념탑
 남·욱, "2·28 대구학생 「대모」사건의 진상," 『세계』, 4월호(1960)
 안동일·홍기범, 기적과 환상, 영신문화사(1960)
 『慶北』제7호(경북고등학교, 1960)
 장면, "2·28은正義의本"
 백기만, "3·1운동과 4월혁명: 경고의 실록과 전통"
 박정봉, "靑史에 빛날 2·28 「대모」: 감격의 그날을 어어 잊으라"
 김윤식, "2·28은 자유인권 혁명의 기수"
 효봉, "2·28이 남긴 교훈"
 이대우, "내일을 위한 투쟁"
 "2·28 경과 상보"
 "2·28 평론 묶음: 언론계는 이렇게 보았다"
 김규성, "4월의 교단"
 채희문, "2·28정신과 학생의 자각"
 『靑丘』창간호(대구고등학교, 1960)
 장면, "대구고교생의 장거는 민주혁명의 선봉"
 이효상, "학생체군에게 부탁하는 말"
 손진홍, "부정에 항거하는 젊음들"
 "2·28의 의미는: 경맥 2·28 특집을 보고"
 『群龍』8호(경대 사대부속고등학교, 1961)
 박재철, "역사의 전환점: 2·28을 중심으로"
 탁희준·이정재, "대구사회의 동태," 『사상계』5월호(1961)
 "2·28 대구학생 대모," 『영남일보』, 1968. 11. 29
 "정치사에 남긴 2·28의 의의," 『영남일보』, 1970. 2. 27
 "10년 뒤에 명해 본 2·28의거," 『대구경제신문』, 1970
 "2·28 10주년 매일신문 특집: 「2·28 학생의거」민주운동의 시발," 『매일신문』, 1970. 2·28
 『경북중고등학교 70년사』
 『대교 30년사』
 『대문 70년사』
 『대구농고 80년사』

- 『장북대 사대부고 40년사』
 홍종훈, "2·28 대구학생의거," 『정경문화』, 2월호(1964)
 『2·28 민주외거 37주년 기념문집』
 『2·28 민주외거 시대사적 재조명 논문집』
 『2·28 민주운동사(사론편 자료편 기념사업회 관련문헌)』
 2·28 민주외거 40주년 김대중 대통령 참석 기념식 비디오(TBC)
 2·28 민주운동 다큐멘터리 비디오(MBC)
 2·28 민주외거 40주년 기념공연 비디오
 2·28 민주외거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28 찬가" 녹음테이프
 2·28 민주항쟁 "햇볕을 밝히려 동방의 빛들이" 비디오
 2·28 민주외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회원가업 명단(개인·단체)
 2·28 민주외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 팝콘켓 외 다수
 영남일보 1960. 2. 10 중고교 입시일 전후기 모두 연거
 매일신문 1960. 2. 11 학생이 혈서
 대구일보 1960. 2. 29 일요일등교 명령이 원인
 대구일보 1960. 2. 29 정계의 관심교조,
 자유당 대구학생대모 보고 미점
 매일신문 1960. 3. 1 (사설) 2·28학생사건과 우리의 반성점
 매일신문 1960. 3. 1 관할 서장 책임추궁, 대구한 치안국장,
 대모사건에 언명
 동아일보 1960. 3. 1 일체를 불온한 불일터. 「원인·책임·
 배후 등 추궁, 여당
 동아일보 1960. 3. 1 (사설) 대구학생시위사건의 책임
 영남일보 1960. 3. 2 (사설) 학원의 자유와 자치문제
 매일신문 1960. 3. 1 대구학생 대모 사건이 필두, AP보도
 동아일보 1960. 3. 3 모당서 배후 조절, 이국장
 서울신문 1960. 3. 2 미성년층의 중·고등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매일신문 1960. 3. 3 (사설) 2·28학생사건은 빨리 수습되어야 한다.
 매일신문 1960. 3. 5 서울서 학생들이 대모
 동아일보 1960. 3. 11 「백만학도 일어나자, 대구 시내에 벽보
 나붙어 외

2·28민주포럼 창립기념 모듬토론

- 2·28민주정신의 현재적 실현 -



▲ 2·28민주포럼 창립기념 모듬토론회 모습

2001년 2월 2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는 2·28민주운동 41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 모듬토론회가 열렸다. "2·28민주정신의 현재적 실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기념사업회가 지역민과 고민을 함께하고 지역과 국가의 번영을 선도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2·28기념사업회 홍종홍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국이후 민주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지역이 2·28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은 물론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민족의 번영을 선도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4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2·28공원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어 국제보상공원과 함께 대구의 그대 정신적 지주의 하나로 갖는다면 오늘 포럼은 2·28정신의 실체를 구현해 나갈 내용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김기옥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2·28민주정신에 따른 오늘의 포럼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2·28정신을 대구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일 교수는 2·28민주운동의 이념적 성격을 국민의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원리추구로 규정하면서, 정부수립 후 등장한 최초의 밑으로부터의 운동으로 보았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어떤 현재적 의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김태일 교수는 그 답으로, 참여민주주의 실현, 시민사회 발전,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적 시민연대 구축, 지방자치 발전,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보편적 정체성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토론에 나선 김은희 대구여성회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과 부분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김은희 회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의지를 과시해야 하거나 여론을 선도하고 권위적인 기득권세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

화해야 할 경우 시민단체간 연대는 더욱 질실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운동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중소시민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주변화를 극복하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 연대의 틀을 짜야한다는 것이 김은희 회장의 생각이다.

최병두 교수는 2·28민주운동의 재해석과 실천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의미를 이승만 정권의 교육지배에 맞서 일어난 '교육운동' '민중운동'으로 확대하였다. 최병두 교수가 제시한 2·28민주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과제는 지역 보수성 극복과 민주·민족운동 활성화, 지역 교육운동 확산, 지역 민중운동과의 새로운 협조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한우 실천불교대구경북승가회장은 2·28민주운동의 의미가 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정신이 계승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내용으로는 학문적인 정리,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 등을 들었다. 한우 회장은 2·28민주운동의 재평가 노력이 사회를 밝히는 청정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내었다.

김준근 반부패연대 대구지부 운영위원장은 2·28정신의 핵심을 시대의 불의에 대한 투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오늘날 서민대중과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기층민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이 시행되는 가하면,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에서 양심적 지식인이나 시민 모두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때 회미하게 끼져가고 있는 2·28정신이 새롭게 살아나서 다시 한번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준근 위원장의 의견이었다.

김형기 교수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지역에서 2·28정신의 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따라서 2·28의 현재적 실현은 과거 30년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2·28정신은 화석화된 채 전승되어서는 곤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21세기에 막 들어선 지금 2·28정신이 창조적으로 이어지려면 세계화-정보화-민주화시대의 지역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지극 희망의 시민포럼 공동대표는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와 독재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것을 들었다. 따라서 2·28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은 독재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개혁의 과제를 지금도 끊임없이 실천하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종호 대구광역시의원은 2·28민주운동을 시민사회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었다고 평가했다. 어둡고 암담한 시기에 독재의 길을 막아서며 역사의 물줄기를 시민사회로 돌려놓은 분수령이라는 것이다. 이제 2·28정신의 자양분을 지역사회에 폭넓게 전파시켜 시민사회의 이념적 지향이 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종호 의원의 생각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한다면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손잡고,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도 만나야한다는 진지한 제안도 곁들였다.

불꽃

정태일

사십 일년의 길을 우리는 바람처럼 걸어왔다. 그날의 향기를 허연 머리카락 속에 감추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코 침묵만은 아니다.

그날의 울분과 외침이 불꽃을 이루고 하나의 횃불로 타올라 이들을 밝히고 있다. 명덕로터리에서 두류공원으로 옮긴 2·28기념탑은 하늘로 치솟아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고, 그 계단에서 단상까지 이어진 긴 폭넙은 우리의 이념을 태워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바다 건너 세계의 지평선까지 퍼져가고 있다.

역사의 요람지 대구의 중앙에서 사방으로 뻗어 더 넓게 활활 치솟고 있다. 그날의 함성도 그 불꽃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전 분노가 민주화의 진원이 되고 카타란 역사의 바퀴를 돌리고 있다. 폭재의 끈을 끊고 가난을 뛰어넘어 선 2·28민주의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지금 새천년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화의 의거를 시정의 한자 이야깃거리로만 회자시켜 자욱한 안개처럼 모호하게 해서는 안된다. 바람에 불꽃이 휘날려 대산을 치달아 오르고 저 골야를 가로지르듯, 모태가 있는 2·28공원에서 민중 속으로, 교과서에서 문헌의 기록으로 퍼져나가 가슴마다 큰 파문이 일어날야 한다. 그 어떤 시대적 격랑에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 어떤 시련에 처할지라도 역사의 물결은 도도히 흘러 하늘 높이 그 불꽃이 일어나야 한다.

곤봉세례를 머리로 맞받아 싸우던 민중의 뜨거운 불꽃은 민주화의 응집이요, 자유의 외침이다. 모자를 던지고 노도같이 질주하던 삼덕로터리 한일로도 민주화의 횃불, 4·19혁명의 도화선이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그 상아탑에서 3·15부정선거를 규탄했다.

불의 앞에 주먹을 불끈 쥐고 2·28의 불꽃을 드높이 채플었다. 이제 더 넓게 더 크게 기념공원엔 기념비가 세워지고, 문화행사가 가열되고, 사단법인의 발족하여 관민합동으로 뭉쳐 송고한 이념을 다시 알리고 외쳐서, 역사의 큰 장을 다듬고 있다. 정의로운 도시 대구는 세계로 뻗어 역사의 큰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다.

역사는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역사는 민주화의 힘으로 다듬고 깎아 보석처럼 빛나야 한다. “불꽃은 뜻뜻하고 약한 수직이다. 한번의 입김이 불꽃을 흐트러지게 하지만 그것은 곧 바로 선다”고 쓴 어느 시인의 식귀처럼 횃불은 작은 삼지에서도 영원히 태울 수 있다.

이제 2·28정신을 더 기다리고 더 높이 치켜들어 그 민주화와 정의의 사상이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앞장서자.

작가약력

경북 영천 출생
2·28 당시 대구상업고등학교 재학중
영남대학교 토목과 졸업
월간 「현대시」 등단
시집 「옛집에 쓴달」외
현 강동건설(주) 대표이사

지금이라도 시작할 때

지금이라도 시작할 때
 또박또박 곱으면서 걸어온 시간 앞에
 꿈에서조차 뒤척이게 했던
 주름 깊은 공간을 이젠 보내자.

장영향

우리 태어난 날 세상을 받아
 사람들 사이에서
 가슴 뛰는 일 하고 싶었다.
 주어진 길 놓쳐 애둘러 온 길엔
 물러서지 않는 바위처럼 캄캄한 때 있었나니
 마음 가뭄에 퇴적층처럼 쌓이던
 고뇌를 머리 흔들며 털어 버리자.

즈문 해의 넓어진 생각으로
 2·28정신의 즙을 짠
 언어를 고운 채르 걸러
 잉겔볼 같은 불르서 정의론
 강 같은, 마음 여는 물르서 너와 나 경계 허무는
 들판 질러가는 바람으로서 새 시대 열어
 땅위의 목숨 더 빛나는 한낱이 되게 하자.

세알 속 우주를 담은 가벼운 흙씨 하나
 아득히 먼 세월 맴돌며 지켜왔듯
 우리
 일어서서 단추를 채우며
 세계의窓 가늠하며
 하늘 층계를 내려온 햇살에
 봄물이 풀려오면
 신명난 봄 잔치 크게 한번 웃어보자.

지금이라도 시작할 때

작가약력

검목 칠곡 출생
 경북여자고등학교 32회 졸업
 현대문학 수필 동인
 대구문인협회 회원
 영남수필 회원
 대구여류문학회 회원
 현대문학 수필작가회 회원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안내

연혁

- | | |
|-------------|---|
| 1960. 2. 28 | 2·28 대구학생민주의거 |
| 1961. 4. 10 | 2·28 민주의거 1주년 기념탑 건립 |
| 1990. 2. 2 | 2·2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발족 |
| 1990. 2. 28 | 2·28 민주의거 30주년 기념행사 및 2·28 기념탑 두류공원 이전 |
| 1991. 2. 21 | 2·2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장주호 초대회장 취임 |
| 1995. 2. 28 | 2·28 민주의거 35주년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
| 1997. 2. 28 | 2·28 민주의거 37주년 기념식 및 문집발간 |
| 1998. 2. 24 | 2·2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제2대 최용호 회장 취임 |
| 1999. 2. 28 | 2·28 민주의거 39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개최 |
| 1999. 6. 22 | 2·28 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창립총회
공동의장 : 문화길(대구광역시), 최용호(경북대학교 교수) 선출 |
| 2000. 2. 25 | 『2·28 민주운동사(전3권)』 출판기념회 및 국제학술대회 |
| 2. 28 | 2·28 민주의거 40주년 기념식(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참석) |
| 3. 2 | 2·28 민주운동 내용 교과서 수록(사회과학탐구, 대구생활 4-1) |
| 6. 9 | 사단법인 설립 준비회의, 이원순 준비위원장 |
| 6. 16 | 2·28 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결산총회 |
| 11. 29 | 2·2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승계 및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설립총회
(공동의장 : 문화길 대구광역시, 홍중홍 매일신문 논설위원 선출) |
| 2001. 1. 5 | 사단법인 설립등기(등록번호 17632-0000455) |
| 2001. 2. 23 | 『2·28민주포럼』 창립 모듬포럼 |
| 2001. 2. 28 | 2·28 대구민주운동 41주년 기념식 (2·28기념탑)
(김대중 대통령 축하메세지) |



2001년 주요사업 계획

- ◆ 『2·28민주포럼』 창립기념 모듬토론회 개최
 - 주제 : 2·28민주정신의 현재적 실현
 - 일시 : 2001년 2월 23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그랜드호텔 5층

- ◆ 2·28민주운동 캠페인 지상 좌담회
 - 일시 : 2001년 2월 25일 오후 3시
 - 장소 : 언론사 회의실(매일신문, MBC, TBC 등)

- ◆ 대구 2·28민주운동 41주년 기념식 및 2·28 청소년공원 기공식
 - 일시 : 2001년 2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41주년 기념식 - 2·28기념탑(두류공원)
2·28공원 기공식 - 구 중앙공원(중구 공평동)

- ◆ 41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남·녀 고교 웅변대회
 - 일시 : 2001년 3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 2·28기념탑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 일시 : 2001년 4월 5일 오전 10시
 - 장소 : 2·28기념탑 앞(두류공원)



◆ 2·28민주운동 사생대회 입상작품 전시회 개최

- 일시 : 2001년 4월 10일~4월 20일
- 장소 : 국제보상운동공원, 경상감영공원(대구문화예술회관)

◆ 2·28민주운동 기금조성을 위한 미술전시회 개최

- 일시 : 2001년 5월 1일~5월 25일
-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한국민주운동 성지순례

- 일시 : 2001년 6월 15일
- 장소 : 2·28기념탑 앞 출발(버스편)
2·28 → 3·15 → 4·19

◆ 2·28민주운동 초·중·고 교사 워크숍(2회)

- 일시 : 2001년 7월 10일 오후 2시 ~ 5시(초등)
2001년 7월 11일 오후 2시 ~ 5시(중등)
-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2·28민주운동 하계 세미나

- 일시 : 2001년 8월 20일
- 장소 : 구룡포 해수욕장

◆ 산불예방을 위한 자연보호 캠페인

- 일시 : 2001년 11월 10일
- 장소 : 앞산 청소년 심신수련장 관리사무소 앞(팔공산 관리사무소)

정 관(定款)

제정 2000. 11.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약칭, 2·28민주운동)』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의 목적은 '2·28 대구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2·28 기념사업
2. 각종 자료수집, 조사, 연구활동
3. 회보 발간, 출판, 문화행사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을 두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원 :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2. 학생회원 : 이 법인의 목적 사업에 찬동하여 가입한 각급 학교 학생
3. 명예회원 : 2·28 정신을 선양하고 이 법인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제6조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4. 품위 보존의 의무

제7조 (회원의 입회)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서류를 공동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념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기타 이 법인의 목적 수행에 반하여 행위를 한때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장 : 2인
2. 부의장 : 6인내외
3. 이사 : 50인 내외
4. 감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공동의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의장 2인중 1인은 대구광역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과 이사는 공동의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공동의장 : 이 법인을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도며, 회의를 주재한다.
2. 부 의 장 : 공동의장을 보좌하며, 공동의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의장이 공동의장을 대리한다. 수석부의장은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이 사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 사 : 이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3조 (고문)

1. 이 법인은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각계의 저명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승인
2.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 법인의 정관변경 및 해산
6.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①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 ③ 이사회의 의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공동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 부결사항에 대한 조치)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중단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공동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공동의장 또는 정회원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 (구성) 이사회는 공동의장, 부의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종류와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1. 정기이사회 : 년 2회 이상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 :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2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규정 변경사항
2. 이 법인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사항
4.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이 법인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3조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공동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회의록)

1. 이사회의 회의록은 공동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총회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이사 3명 이상이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5조 (위원회)

1. 이 법인은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총무 위원회 2)기획 위원회 3)재무 위원회 4)홍보 위원회 5)출판 위원회
6)사업 위원회 7)학술 위원회 8)대회협력 위원회 9)회원 위원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는 23조 1항 외에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구성, 임무, 운영) 각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연구소) 이 법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소를 두며, 이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 (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독지가의 기부 등으로 이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과 총회의 의결로 편입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로부터의 이월금과 은행예금으로 한다.
3. 이 법인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이 법인의 재산에 편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 사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4. 기본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처분할 수 있다.

제29조 (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수입

제30조 (예산 및 결산)

1. 이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공동의장이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이 법인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계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2조 (운용제한) 이 법인의 재정운용은 제1금융권을 통해서만 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33조 (설치)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공동의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운영)

1. 사무총장은 공동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시 당연직 간사가 된다.
2. 사무처의 편제, 임무와 사무요원의 자격, 근로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한다.

제3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행정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 법인의 설립 동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인은 「2.28민주의거 기념사업회」와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2.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에 가입한 회원중 학생회원은 학생회원으로,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 새롭게 출발



▲ 지난해 11월 29일 새로 선출된 홍종흠(洪宗欽) 공동의장이 선출직후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2·28 기념사업이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의 발족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29일 (수) 오후 4시 한국은행 대구지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본 사업회 발족식에는 준비위원 및 발기인과 문희갑 대구광역시장을 비롯 각급기관장, 2·28회원, 학생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 하였다. 이날 「사단법인 2·28 대구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총회에서는 본 연구원 편집 위원장이며 매일신문 논설위원인 홍종흠 위원을 문희갑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제3대 회장겸 공동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법인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2·28 민주운동」은 2·28 민주 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명실공히 우리나라 광복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의 효시로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2·28민주의거 기념사업과 특별사업을 주관해오면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40주년 기념식준비, "민주운동사"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10여가지의 사업성과를 거둔 최용호(崔龍浩)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 되었다. 이날 선출된 제3대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공동의장 : 홍종흠 (매일신문 논설위원),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 부 의 장 : 이덕천, 강 황 (대구광역시 의회 부의장), 김규재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 회장), 백진호 (홍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완식 (대륙기업 대표이사), 김상숙 (극동물산 대표이사)
- 감 사 : 이수광 (공인회계사), 소일봉 (대구광역시 서구 부청장)
- 이 사 : 최만기 (산학경영기술연구원장), 이원순 (청구정형외과원장) 등 87명이며,
- 사무총장에는 박명철 현 사무처장이 재 임명되었다.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일지

2000. 11. 29 사단법인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설립 총회 (한국은행 대구지점 회의실)
 ○ 정관(안) 통과
 ○ 공동의장 선출 (문화간 대구광역시장, 홍종홍 매일신문논설위원)
11. 30 사단법인 2·28 민주운동 임원선출 언론기관 통보
12. 1 2001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동구청)
12. 5 각 언론기관 신입인사차 방문 (공동의장·사무총장)
12. 7 TBC 대구방송, 대구광역시 교육청 업무협의차 방문 (공동의장·사무총장)
12. 8 2·28 공헌 조성과 관련중앙 초교 인접상가 지주와 대구시장 면담장소 참석 시형점검실(공동의장·사무총장)
12. 21 신임 이진근 행정관리국장 축전
12. 26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대구광역시)
12. 29 사단법인 설립허가 (대구광역시)
2001. 1. 5 사단법인 등록 (동대구 등기소)
2001. 1. 12 2001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대구은행 회의실)
 ○ 9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안) 통과
 ○ 2·28 민주운동연구소 설립 및 2·28 민주포럼 창립(안) 통과
 ○ 임원 년회비 납부(안) 통과
1. 16 "2·28 민주운동연구소" 편성위원회 개최 (법인사무처)
 ○ 박재건 위원장 선출
 ○ 계간지 "2·28의 햇불" 창간호 제작(안) 확정
1. 17 학술위원회 개최 (이해수 위원장 법인사무처)
 ○ 2·28 민주포럼 개최(안) 통과
1. 18 대구시민단체 신년교례회 참석 (사무총장, 대구흥사단회의실)
1. 22 2·28의 햇불 축사 및 원고의뢰
1. 23 대구지방 보호청 보조금 요청
1. 30 대구광역시 초·중·고 2·28 민주운동 홍보교육 의뢰 (대구교육청)
1. 31 학술위원회 개최 (법인사무처)
 ○ 2·28 민주운동연구소 규정(안) 통과
2. 2 대구광역시 보조금 요청
2. 6 신임 장성진 대구지방 보호청장, 취임 축전
2. 8 2·28 민주포럼 토론회자 원고 청탁
2. 12 3차 학술위원회 개최
 ○ 포럼준비 점검
 ○ 2·28 민주포럼 발기인 추대(안) 통과
2. 13 2·28 민주포럼 후원기관 명칭사용 협조요청 (각 언론기관)
2. 15 2·28의 햇불 광고 협조요청 (대구은행)
2. 16 2·28 민주포럼 초청장 및 총무위원회 소집 통보 (41주년 기념식 준비)



▲ 39주년 학술대회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99. 1. 18. 장주호 초대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아리아나네)



▲ 99. 2. 28. 39주년 기념식
(2·28 기념탑)



▲ 99. 6. 22.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창립을 마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2000. 2. 8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이사회
(대구시청 상합실)



▲ 99. 6. 24. 4.19혁명 관계자 대구2·28기념탑 참배



▲ 2000. 2. 25. TBC 이길영 사장님이
최용호 공동의장에게 협찬금 전달(동대구관광H)



▲ 2000. 2. 25. (주)태왕 권성기 회장의
협찬금 전달(동대구관광H)



▲ 2000. 2. 25. 4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동대구관광H)



기 2.28 민주이거 40주년 기념



▲ 2000. 2. 28.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40주년 기념식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2000. 2. 26. 2·28민주운동사 출판기념회 (동대구관광사)



▲ 2000. 2. 26. 2·28민주운동사 출판기념회 (동대구관광사)



▲ 2000. 2. 28. 최덕수 대구고등법원장의 축하연설 (대구문화예술회관 연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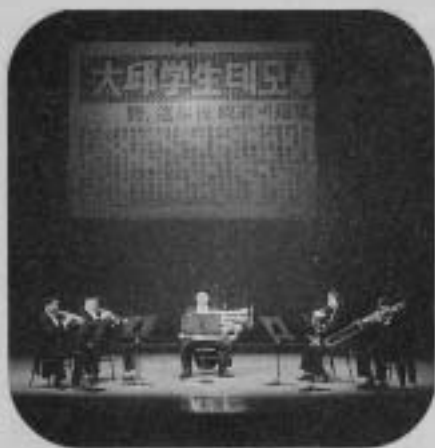
▲ 2000. 2. 8. 연희장에 참석한 2·28주억들 (대구문화예술회관 연회장)



◀ 2000. 2. 28. 40주년 기념식전
2·28기념탑에 헌화



▲ 2000. 2. 28. 헌화를 마치고, 2·28 기념탑 앞



▲ 2000. 3. 8. 40주년 기념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2000. 3. 8. 40주년 기념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28 학보



▲ 2000. 6. 2. 2·28민주운동 장기발전 워크숍
(대구은행)



▲ 2000. 6. 16. 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결산총회(아리아나)



▲ 2000. 11. 29. 사단법인 설립총회
(한국은행 대구지점)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원가입 안내말씀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60년 2월 28일, 대구학생 민주의거는 독재정권에 집단적으로 항거했던 광복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으며, 4·19혁명의 전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2·28 기념사업회에서는 숭고한 2·28 대구민주운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기념식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2·28 민주운동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0주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기념식을 거행하고, 「2·28 민주운동사」 책자 출판과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40주년 특별 기념사업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회에서는 2001년도 41주년을 맞아 2·28 민주운동정신을 대구정신의 한 주류로 영원히 이어가고, 21세기 국민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1차로 22,800명의 회원모집과 함께 다음과 같이 뜻있는 특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2·28 대구민주운동 시민포럼
- 2·28 대구민주운동 초등교과서 수록(대구생활 4-1)
- 대구지역 초·중·고 글짓기 공모전 등

이와같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과 출향인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저희들의 노력을 심분 양광하시고, 2·28 민주운동 계승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개인회비 10,000원(단체회비 100,000원 이상)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대구은행 018-05-002264-2

예금주 :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홍종흠

2001년 월 일

사단법인 2·28 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정 문 회 갑 · 홍 종 흠

2·28의 햇불

創刊을 祝賀합니다.

11.11.28 創刊을 祝賀합니다.

2028

慶北

慶北中高 第42回 同期會

慶北中高 第42回 在京 同期會



우리고장 우리은행

21세기 최우량 지역전문은행 - 대구은행
강하고 튼튼한 지역의 대표은행입니다.

대구·경북에는
대구은행이 있습니다